

전략적 지출검토 (Strategic Spending Review) 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서영빈 부연구위원

CONTENTS

I. 배경	1
II. 제도 개요	2
① 의 의	2
② 주요 운영 요소	3
III. 국가별 제도 현황	4
① 영 국	4
② 네덜란드	8
③ 캐나다	11
④ 독 일	14
IV. 우리나라 제도 현황	18
① OECD 조사 결과	18
② 지출효율화 관련 제도	19
V. 시사점	23
참고문헌	25

요약

배경

세입 기반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지출검토 제도 활용 가능

-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확대된 지출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능을 수행
-

국가별 사례

지출 절감보다는 정책 수요에 맞는 자원 재배분과 전략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 (영국) 재정 지출을 포괄하는 정례적·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해 중기지출한도를 관리하며 지출 효율화를 통해 우선순위 분야에 재원을 집중
 - (네덜란드) 부처간 협력을 전제로 전문가를 포함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출검토를 수행
 - (캐나다) 재정여건에 맞춰 검토 범위와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복·저성과 사업 재조정과 절감 목표 설정하여 우선순위 분야 지출을 확대
 - (독일) 성과·목표 중심의 예산관리 전환을 위해 지출검토를 최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 모니터링, 성과지표 개선, 부처 역량 강화 등에 중점
-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의 효율성을 점검

- 재정사업 성과관리로 사업 단위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출구조조정으로 중복·비효율 사업을 재편하여 재정여력을 확보
-

시사점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게 고도화할 필요

- 예산과의 연계, 중기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전담 기구 여부 검토, 제도의 지속적 발전 노력 등이 필요
-

□ 세입 기반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을 강화할 필요

- 복지수요 확대, 경기 대응,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책 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세입여력은 정체되어 있어 재정 운용의 제약이 심화
- 기존 지출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복·비효율 지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며 우선순위를 재정비 하는 절차의 중요성이 확대

□ 예산 제약하에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및 자원 효율적 배분을 위한 수단으로 지출검토 제도 활용 가능

- 지출검토는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구조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¹⁾
-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지출을 감축하고 우선순위 사업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데에 지출검토를 활용해왔음

□ 본 고는 지출검토의 국가별 운영 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적 여건과 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

- 각 국의 지출검토 운영체계와 절차, 적용 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여 제도적 특징과 최근 운영 사례를 검토
-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지출검토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시사점을 모색

1) 지출검토 제도는 개별 국가마다 예산 및 재정 제도가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예산 지출에 대해 외부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우선순위나 효율성이 낮은 지출을 삭감하여 지출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함(원종학, 2018)

1. 의의

■ 지출검토는 외부환경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분석 틀을 통해 우선순위나 효율성이 낮은 지출을 조정·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World bank, 2018)

- 개별 국가는 자국의 예산제도에 따라 지출검토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 합리화와 자원 재배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 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과반이 정례적으로 지출검토를 실시하고(OECD, 2023), IMF는 이를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한 도구임을 제시(IMF, 2023)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기존 지출의 체계적인 분석과 지출 절감을 통해 새로운 지출을 수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로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부분적 지출 절감에 중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위 예산구조를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거나 효과성 낮은 지출을 구조적으로 조정
- 즉, 기존 지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정부지출의 삭감·재배분·효율성 제고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발전

■ 지출검토 절차는 일반적으로 검토 범위와 목표 설정, 절감·재배분 옵션 및 권고안 마련, 정책 결정 및 이행으로 구성

- 검토 범위와 목표 설정 : 검토 범위(선택적·포괄적)와 목표를 확정,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재정 절감 등 목표를 설정
- 절감·재배분 옵션 및 권고안 마련 :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에 따른 방안과 권고안 마련
- 정책 결정 및 이행 : 예산에 반영할 지출검토 방안을 결정하여 실행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

2. 주요 운영요소

□ 정치·행정 체계에 따라 국가 간의 지출검토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지출검토가 잘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

- 명확한 목표와 범위 설정 : 지출절감, 정책재구성 등 달성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존재
 - 영국은 재무부 주도로 지출검토의 목표를 정부의 지출 절감으로 명확하게 두어 예산 절감 실적을 도출
 - 비교적 최근에 지출검토를 도입한 독일은 검토 범위를 한정된 선택적 지출검토를 통해 명확한 목표와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 개선 방안 도출, 예산 재배분을 수행
-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적 역할이分明 : 대상·목표 설정 단계부터 최종 정책 제언까지 정치적 지지와 리더십은 중요하게 작용
 - 네덜란드는 총선 후 연정 합의문에 지출검토 과제를 포함해 정치적 구속력을 확보
- 거버넌스의 체계적 구성 : 전담부서 신설, 부처 간 작업반 구성, 외부 전문가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네덜란드의 작업반은 관련 정책에 직접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의장이 주재하고 주무부처·재무부·전문가·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
- 예산·중기재정계획과의 높은 연계성 : 검토 결과가 예산편성과 직접 연결되어 실효성 확보
 - 영국은 3년 주기의 지출검토를 중기지출계획과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의 기본 틀로 활용
- 높은 투명성과 정보공개 : 검토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
 - 영국은 지출검토와 정부의 계획·성과 관리체계 간의 연계를 설명하는 지침서(Framework materials) 등 검토 과정과 관련 자료를 공개
- 제도의 주기적 점검 : 지출검토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자국 여건에 맞게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제도의 성숙도를 향상
 - 캐나다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출검토의 명칭, 목적, 범위를 바꾸어 유연하게 운영

1. 영국

□ 재무부(HM Treasury) 주관으로 포괄적 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를 운영

-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출계획을 수립·제출하면 재무부 지출관리부서가 이를 검토·조정하여 최종 지출한도를 확정·공표

〈표 1〉 영국의 지출검토 절차(2025)

시기	단계	주요내용
2024년 10월	총지출한도 확정	2024 가을예산(Autumn Budget 2024) 2025/26 부처별 지출 상한 확정 2026/27~2028/29 총지출상한(DEI envelop) 확정
2024년 12월	지출요구안 제출 요청	재무부는 각 부처에 지출요구안 제출을 요청
2024년 12월 ~ 2025년 2월	지출요구안 검토	부처에서 제출한 지출요구안에 대해 외부전문가(Challenge Panel) 검토 등을 수행
2025년 1월 ~ 2025년 5월	재무부-부처 협상	재무부는 각 부처 장관과 최종 예산을 협의
2025년 6월	지출검토 발표	2024 가을 예산에서 확정된 총계(envelop)의 부처별 한도 확정
2025년 7월	의회 승인	지출검토 결과를 의회에서 승인(Estimate)

자료: 영국 재무부(2025)

- 예산 총량 관리뿐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 설정, 공공서비스 성과 개선, 부처 간 협업 촉진 등을 목표로 하여 3~4년 주기로 실시
 - 사전에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부처별 지출한도(DEI,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를 지출검토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전체 정부지출의 약 40%를 차지²⁾

2) 나머지 60%는 연간관리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에 해당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나 기타요인에 따라 결정·배분됨. 그럼에도 각 부처가 연간관리지출에서 절감한 액수를 토대로 부처별 지출 한도의 증액을 요청할 경우 지출검토 고려의 대상이 됨.

- 검토 결과는 예산편성과 직접 연계되는 구조이며, 최근에는 정책의 성과·효율성 검토와 함께 부처 간 공동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중심(Cross-department Mission Group) 접근이 강화
- 지출검토를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성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각 부처에 향후 사용가능한 자원의 규모를 밝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처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역할 수행

□ 단기적 예산편성 방식을 개혁하고자 1998년 포괄적 지출검토를 도입하여, 2025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지출검토를 실시

- 1998년 노동당 정부는 재정개혁의 한 부분으로 「재정법(Finance Act)」을 통해 포괄적 지출검토를 도입하여 법에 규정된 중기재정계획과 공공지출계획의 원칙에 따라 운영
 -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운용의 원칙 5가지*와 정부채무 관리를 위한 2대 규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안정 및 채무감축에 중점
 - *5대 원칙: 재정정책 목표 설정의 투명성, 경제파급효과의 안정성, 재정운용의 책임성, 세대간 공정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 *2대 규칙: 황금률(Golden Rule)과 투자의 지속가능성 규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³⁾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시행한 감세정책⁴⁾으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재정책임법」과 2011년 「예산책임과 국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
 - 해당 법률은 영국에서 최초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입법화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포괄적 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졌고 지출삭감 중심으로 제도 변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지출검토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여 긴급 지출을 중심으로 운영
 - 코로나19 이전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각 부처에 지출절감 목표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중기재정계획과 함께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 중심으로 실시
-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보건·교육 중심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대부분 기존 지출구조를 유지한 채 단순 증감만 반영하는 점증주의적 방식으로 추진

3) 황금률: 경기순환 속에서도 경상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차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부차입을 하더라도 오직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만을 위한 차입에 국한함

지속가능성 규칙: 경기 국면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분야의 순채무율을 유지해야 함

4)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율을 17.5%에서 15%로 2.5%p 인하

〈그림 1〉 영국의 지출검토 시행(1998-2025)



주: 최근 지출검토(2019-2025)는 이전에 비해 비정례적으로 운영

자료: Brein(2025)

□ 최근(2025) 지출검토는 제로베이스(Zero-based review) 방식으로 모든 지출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부의 우선순위 분야에 재원을 집중

- 정부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지출검토를 추진
 - (미션 중심, mission-led) 부처별 예산이 아닌 정책 목표 단위로 자원을 재배분하고, 공통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 성과지표를 관리
 - (기술 활용, Technology-enabled) 부처간의 실시간 지출 현황 공유 및 혁신기금 신설 등 디지털·데이터·AI를 행정 전반에 적용하여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성과개선 도모
 - (개혁 추진, reform-driven) 공공부문 조직과 절차를 구조적으로 재편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순 예산삭감이 아닌 서비스 제공 방식의 재설계*를 지향

* 보건(예방중심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정신건강 및 장기요약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대), 지방정부 재정(통합예산제도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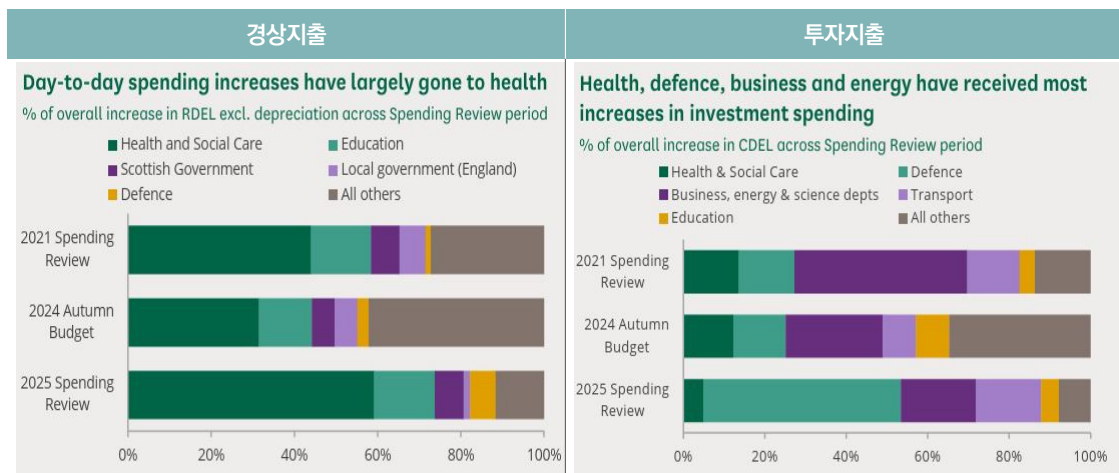
-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지출검토를 실시
 - (정부 혁신, Productive and Agile State) 데이터·디지털AI 기술을 행정전반에 적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생산성과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제고
 - (국가 안보 및 기반 강화, Strong foundation)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국방비를 확대하고 투자를 강화
 - (보건 및 공공서비스 개혁, An NHS fit for the future, opportunity for all and safer streets) 보건·교육·치안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

- (경제성장 및 청정에너지, Growth and clean energy) 경제·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R&D·AI⁵⁾ 혁신 투자, 지역 균형 발전, 청정에너지 전환 등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지출검토 결과, 2028/29년도까지 부처별 최소 5%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절감한 재원은 정부 우선순위 분야에 재배분**

- 기술적 효율화를 추진하여 부처별 최소 5%를 지출 절감하고, 행정예산의 경우⁶⁾ 2029/30년도까지 2025/26년도 대비 실질 기준 16%를 감축
- 절감된 재원은 공공서비스 전반의 디지털·AI 투자 확대와 보건 및 공공서비스, 국가안보, 청정에너지 전환, 경제성장 등 우선순위 분야 예산 확대에 활용
- 우선 순위 분야에 재원을 확대한 결과, 보건·사회복지부 부처별 지출한도(DE)가 2028/29년도 2,467억 파운드⁷⁾로 가장 큰 규모이며,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의 지출한도 실질 증가율이 연평균 16.0%로 가장 크게 증가
- 경상지출(Resource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RDEL)은 보건·사회복지 분야, 투자지출(Capita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CDEL)은 국방 분야가 확대

〈그림 2〉 영국의 분야별 지출검토 결과(2025)



자료: 영국 재무부(2025)

5) 2025년 지출검토 결과, 과학혁신기술부는 2025/26-2029/30 회계연도까지 총 20억 파운드 이상을 AI 분야에 할당. 연구 인프라 확충, 기구 신설,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연구소 지원 등을 추진(영국 재무부, 2025 Spending Review)

6) 부처 또는 공공기관이 자체 운영에 필요한 관리·행정비용

2. 네덜란드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주관하되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하여 지출검토를 수행

- 재무부와 부처가 협의 후 내각이 승인한 주제에 대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출검토를 실시하고 내각에 제출
- 포괄적 지출검토는 특정 해에 예산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외의 해에는 정해진 영역에 대해 선택적 지출검토를 추진
 - 지출검토는 개별 예산 항목이 아닌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표 2〉 네덜란드 지출검토 절차

시기	단계	주요내용
t-1년 상반기	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승인	재무부 주도 및 부처 협의로 주제 선정 내각이 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nce) 승인
t-1년 9월경	작업반 구성 및 검토 착수	주제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목적, 범위, 목표, 정책 옵션 등을 검토
t년 3월경	검토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및 재무부 관련 부처 협의
t년 중반기	내각 답변안 작성	검토 보고서에 대한 부처안 마련, 필요시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t년 하반기	예산 반영	예산비망록(Budget Memorandum) 부록에 공식 반영하고, 작업반 최종보고서는 온라인 공개

자료: 네덜란드 정부(2022)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매년 3~7건 지출검토를 정례적으로 실시, 제도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원칙(ground rules)을 마련
 -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니라 다부처 협력(Interdepartementale beleidsonderzoeken: IBO) 형식으로 이루어짐⁷⁾
 - 운영원칙*은 작업반의 구성 방식, 지출 방안 제시 기준, 결과 활용 등에 대해 규정
 - * ① 작업반은 관련 정책에 직접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의장이 주재하고 부처·재무부·전문가·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 ② 지출 방안은 예산 및 정책 효과를 반영하여 복수로 제시하고 최소 20% 예산 절감이 반영된 대안으로 마련
 - ③ 거부권(veto-rights)이 허용되지 않고 최종 보고서는 공개되며 정치와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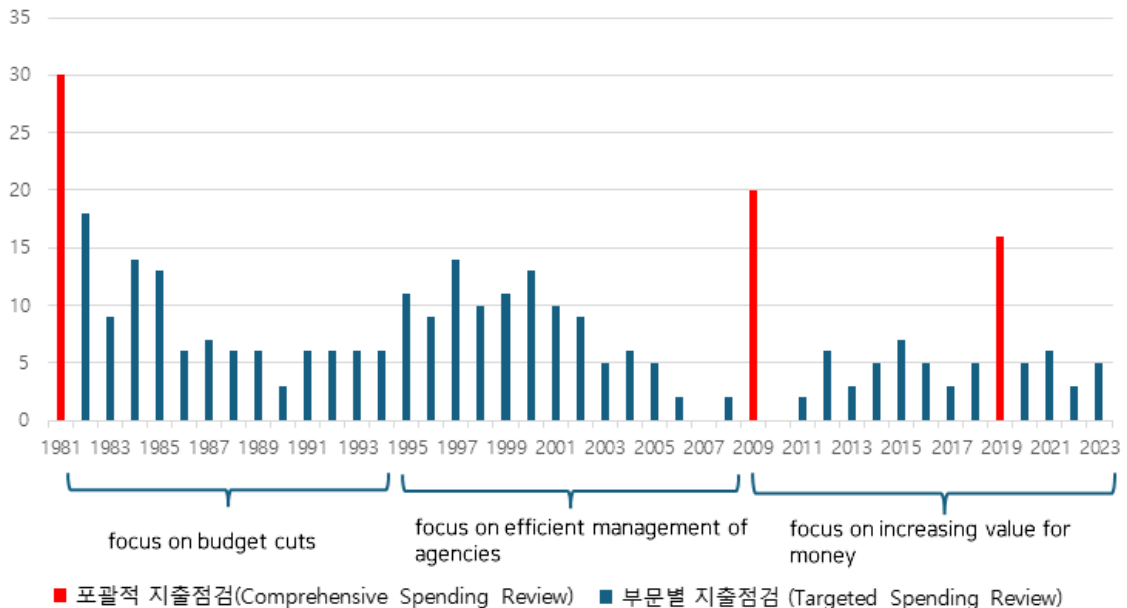
7) 지출검토의 네덜란드어 명칭을 직역하면 부처 간 정책연구를 의미

- 정치적 개입의 최소화, 정례적 운영, 결과 활용의 유연함을 특징으로 함
 - 단순한 지출감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책 재설계와 성과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

지출검토를 도입한 1981년부터 현재까지 교통·복지·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300건 이상 수행

- 제도 시행 초기부터 1995년까지는 재정 절감을 주요 목적으로 지출검토를 실시
 - 내각 승인, 작업반 운영,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도입
 - 매년 20% 절감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연 20~30건의 지출검토 실시
- 1995년 이후 지출 절감 요건을 폐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지출검토를 실시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
 - 2000년대 이후 지출검토 대상이 연 3~5건으로 축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출검토가 소극적으로 운영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및 정부재정의 악화로 2009~2010년 20개의 분야에서 350억 유로 절감을 목표로 포괄적 지출검토를 실시
 - 정책영역별로 20개 주제의 지출예산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안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 (원종학, 2018)
 - 검토 결과는 선거 전 정당의 공약을 점검하고 조안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 새로운 정부의 재정정책에도 활용
- 2019년에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정책 대응 마련을 위해 포괄적 지출검토를 실시
 - 지출 항목별로 정책 현행 유지, 20% 감축, 20% 확대라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
 - 코로나19로 인해 검토 결과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분석 결과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지출한도 설정과 부처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

〈그림 3〉 네덜란드의 지출검토 (1981-2024)



자료: 네덜란드 정부(2024)

□ 최근(2024년)에는 주택개발 및 토지 이용, 기업금융, 고등교육 효율과 연금, 부채 등을 주제로 지출검토를 실시

- 인구 고령화, 주택난, 교육투자 등 장기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의 정책 대안이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 결과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제안
- 검토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며,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과 재정여력 확보에 기여
 - 정부의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예산비망록(Budget Memorandum) 부록에 지출검토 내용이 수록되어 예산과정에 공식 절차로 운영

〈표 3〉 네덜란드의 지출검토 주제(2019~2024)

연도	주제	
2019	• 보조금 (part 1) • 네덜란드 내 유학생	• 대기질 • 카리브해 지역 관계
2020	• 보조금 (part 2)	• 시간제 근로
2021	• 에너지 전환 자원 조달 • 교육 시설(housing of education) • 국방부 보유 부동산(real estate of Ministry of Defense)	• 국토 및 공간 계획 • 정부 조직(Agency)
2022	• 공공투자 • 청소년 범죄 • 노인 돌봄	• 부의 분배 • 초중등교육 • 사회보장제도 간소화
2023	• 기후 정책 • 미래 유망 직업대학(Future proof vocational colleges)	• 생물다양성
2024	• 주택 산업 지원(Instruments for the housing industry enterprises) • 자원 조달(Financing) • 연금	• 고등교육 효율화 • 부실 채무(Problematic deb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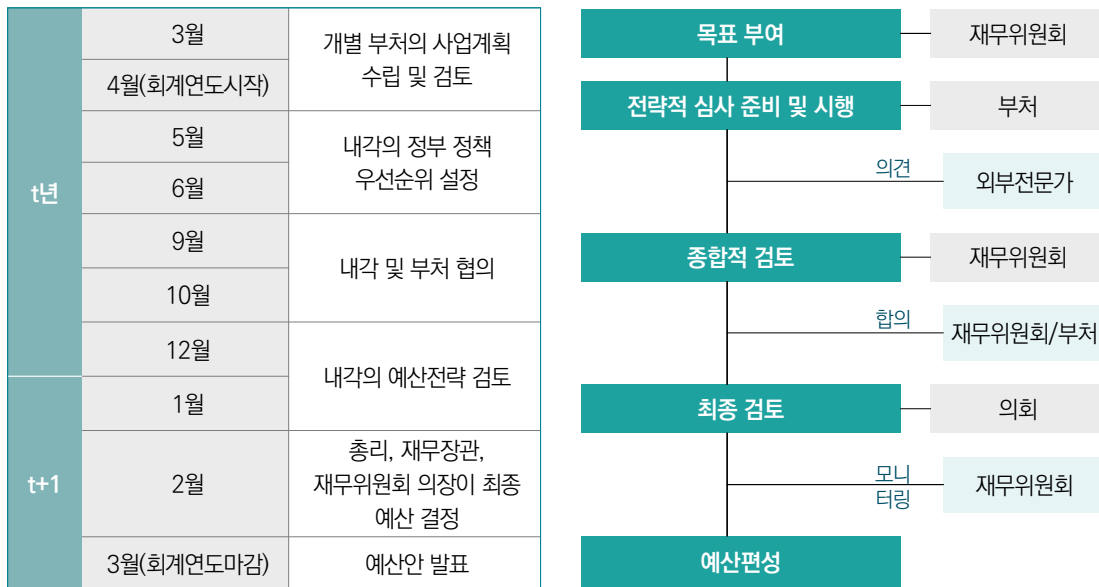
자료: 네덜란드 정부(2024)

3. 캐나다

□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 Secretariat, TBS) 주관으로 포괄적 지출검토 (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 CER)를 운영

- 각 부처에 지출 목표를 부여하고 감축안은 부처에서 마련하되, 재무위원회가 이를 평가·선별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 행정 효율화와 자원의 우선순위 재배분을 주된 목표로, 재정 절감이 필요한 시기에는 재정적자 축소를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재정 여건에 맞추어 비정기적으로 시행
- 지출검토 결과는 예산안이나 경제재정성명(Economic and Fiscal Statement)등 공식 문서로 발표
- 각 시기마다 재정여건과 정책환경에 맞게 제도의 명칭·목표·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병행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 1990년대의 재정위기 대응형 ‘프로그램 검토’에서 출발하여, 2000년대 이후 ‘전략적 검토’, 2010년대의 ‘운영검토’, 2020년대의 ‘포괄적 검토’로 이어지는 진화적 체계를 형성

〈그림 4〉 캐나다 예산과정과 지출검토 절차



자료: 캐나다 정부(2025)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1990년대 재정사업 심사(Program Review) 이후 새로운 정책목표에 따라 명칭, 목적, 범위 등을 다르게 하고, 2000년대 전략적 사업 심사(Strategic Review)로 발전

- 1990년대 재정사업 심사(Program Review)를 통해 '94~'97년 총 사업 예산 금액 대비 10% 수준으로 감축을 실시(탁현우, 2017)
 - 전면적 예산삭감이 아닌,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상대적 중요성과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개혁을 추진
 - * ① 국가목적 또는 공익의 기여 여부 ② 정부의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역할 여부 ③ 연방정부의 역할의 적절성 및 주정부와의 역할 분담 필요 여부 ④ 사적 영역이나 비영리 영역 이전 여부 ⑤ 사업의 지속을 위한 향상 방안 ⑥ 사업이 재정적 제약 속에서(다른 재정사업과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
- 2007년에 4년 주기의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로 개편하여 심사에 따라 도출된 새로운 지출 우선순위 영역에 재원을 투입
 - 부처별 예산 감축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뿐 아니라 부처별·재정사업별로 전략적 우선순위의 체계적인 도출도 중요
 - 부처별로 재정사업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부처 간의 비교를 통해 재정 지출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2011년에는 검토 절차에 정치적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전략적 운영 검토(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 SOR)로 제도를 전환하여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전부처 대상 지출검토 추진
 - ① 정부의 우선순위(Government Priority)와 부합하는지, ② 효율적이고 효과적(Effective and Efficient)으로 지출되는지, ③ 투자가치(Value for Money)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포괄적 방식의 지출검토를 수행
 - 성과목표체계(Program Alignment Architecture, PAA)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하위 5%의 사업과 하위 5%의 성과를 내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출 절감을 추진
- 2015년 이후에는 재정 긴축보다는 재정 상황의 호전을 반영하여 자원배분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기능 및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자원배분검토(Resource Alignment Review)를 수행
- 코로나19로 인한 적자급증과 금리상승에 대한 부채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에 출장경비, 인쇄·출판,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감축하는 지출 재조정(Refocusing Government Spending)을 실시
 - 코로나19 대응 이후 적자 통제 및 예산 압력 완화를 위한 일회성 절감 조치로, 일부 지출이 재배치 되었으나 제도적 연계성은 미흡

〈표 4〉 캐나다 지출검토 제도 연혁(1994-2025)

시기	명칭	특징
1994-1996	재정사업심사 (Program Review)	구조조정의 성격 누적 301억 달러 절감, 공무원 감축
2004-2005	지출검토위원회 (Expenditure Review Committee)	내각주도로 검토 약 199억 달러 절감
2006	지출검토 (Expenditure Review)	소규모 단발성 검토 특정 부문의 지출 조정
2007-2011	전략적 검토 (Strategic Review)	전 부처와 기관 대상 4년 주기 검토 우선순위 재배분 및 정부 축적
2011-2012	전략적 운영 검토 (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	재정 적자 감축 목표 약 306억 달러 절감, '13~14년 흑자 전환 달성
2015-2021	자원배분 검토 (Resource Alignment Review)	재원 재배분과 효율화에 초점
2023-2024	지출재조정 (Refocusing Government Spending)	코로나 이후 지출 절감 약 128억 절감
2025	포괄적 지출검토 (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	구조적 절감 및 재조정

자료: 캐나다 정부(2025)

□ 최근(2025년)에는 책임 있는 성과 중심의 지출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지출검토 (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 CER)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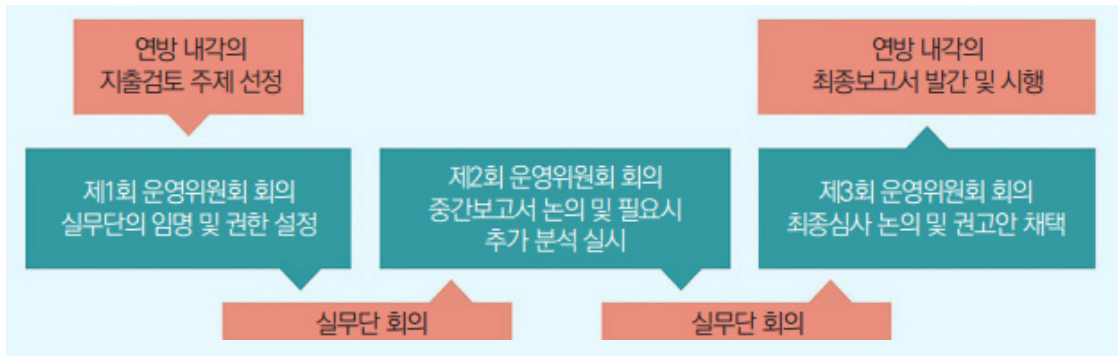
- 비핵심 사업과 정부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구조적 절감을 시행
 - 지출 낭비, 비핵심, 중복프로그램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경상경비(Day-to-day operating spending) 절감 수행
- 전 부처를 대상으로, 각 부처는 2026/27년에 7.5%, 2027/28년에 10%, 이후에는 최대 15% 수준의 절감안을 제출
 - 재무위원회(TBS)가 주도하고 부처가 협력하는 구조이며 성과 중심 평가와 중장기 재정 전략 재배치를 목표로 설정
 - 의회·법원·수익자부담기관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관련 이슈로 2%로 절감 목표를 완화
- 검토 결과, 2028/29년도까지 약 250달러(최대 280억 달러)를 절감하고 국방·주택·인프라 투자를 확대
 - 지출검토 결과는 2026년 예산안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며, 단기적 삭감이 아닌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
 - 불필요한 규제 감축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부처 규제 검토(Cross-departmental review)도 함께 추진
 - 인공지능(AI) 및 자동화(Automation)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4. 독일

□ 내각에서 결정한 특정 주제나 영역을 채택하여 연방재무부(Finance Ministry) 주관으로 선택적 지출검토를 운영

- 연방 내각에서 지출검토 주제와 관련 부처가 결정되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출검토를 실시
 - 운영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실무단을 임명하고 검토 목적, 절차 원칙, 검토 기간 등을 설정
 - 재무부와 관련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단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운영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이를 검토
 -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실무단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최종 검토 및 결정

〈그림 5〉 독일의 지출검토 절차



자료: 독일재무부(2025)

- 정부 서비스 개선, 새로운 정부 정책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재정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지출검토를 활용
 - 최종보고서는 연방예산령 규정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과 함께 제출하는 재무부 재정정보고서에 수록

□ 2015년에 예산편성 과정과 연계하여 지출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재무부 주도하에 매년 주제를 선정하고 실무단을 구성

- 재무부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한 모델을 개발하여 2015년에 지출검토를 도입·시행
 - 전통적으로 투입 통제 위주로 운영되어 온 독일의 예산관련 제도를 성과지향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지출검토를 도입
 - 제도 초기에는 복합운송, 직업훈련에 관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 등 소규모 지원 정책을 주제로 하여 제도 경험을 축적

〈표 5〉 독일의 지출검토 주제(2015-2025)

연도	주제
2015/2016	• 복합운송 • Mobi-EU(EU권 전문인력의 독일 노동시장 진입 지원 정책)
2016/2017	• 기후/에너지 정책 • 주택 정책
2017/2018	• 공공 조달 방안 • 위기에방, 위기대응, 안정화 및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
2018/2019	• 공공행정의 내부 미수금 관리 개선
2019/2020	• 교육, 노동 시장 재진입 및 창업
2020/2021	• 인건비 예산의 개선
2021/2022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현
2022/2024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성과 예산 개선
2024/2025	• 성과 예산을 위한 개선 방안 실현

자료: 독일재무부(2025)

- 2021/2022년도에 실시된 지출검토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예산과 연계하도록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설계

- 연방예산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할 수 있는지, 방안 등을 살펴보고 권장사항을 제시

- 2022/2024 지출검토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연방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최근(2024/2025) 지출검토 주제인 성과관리 제도와 연계

- (Signaling) 예산을 단순한 재정수단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정책 성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관리 도구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조성

- (Tagging) 각 부처 예산 설명서에 해당 사업이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명시

- (Analysing) 예산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지출 항목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결하여 검색 및 시각화하도록 설계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 최근 2024/2025 지출검토는 목표 및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을 강화하여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 기반 예산 관리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

- 성과·목표 중심 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예산 관리, 공무원 교육 및 역량 강화, 투명성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
 - 투입(Input) 중심의 지출구조를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정책목표와 지출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
 -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고도화
 - 부처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포털을 통해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
 -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성과 기반 예산 관리 제도의 정착을 지원
- 지출검토 대상을 주요 예산수치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예산안과 지출검토를 연계
 - 예산을 단순한 지출계획이 아닌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의 종합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에 중점
 - 예산과 정책목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
- 검토 결과, 성과·목표 중심 예산운영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과 체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 부처별 지표·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예산-정책목표-성과 간 관리 체계의 구축을 보완할 필요

1. OECD 조사 결과

■ OECD에서 실시하는 개별 국가의 지출검토에 관한 설문조사(Spending Reviews Survey)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례적으로 지출검토를 운영하는 국가에 해당

[OECD 지출검토에 관한 조사(2023)⁸⁾]

1. 개요

- 목 적: 지출검토 운영에 관한 국가별 제도의 이해
- 방 식: 정부가 OECD 공통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취합 (2년 주기)

2. 문항 구성

- 목 적: 재정건전성 확보, 지출 효율성 제고, 우선순위 조정, 정책효과 개선
- 주 체: 재무부(재정당국) 주도, 개별 부처 또는 내각 참여
- 시 기: 정례적 또는 필요시(ad hoc)
- 범 위: 특정 분야 또는 포괄적
- 절 차: 부처 요구서 제출 → 중앙예산당국 검토 → 내각·국회 반영 (일부국가는 부처와 내각이 합동으로 협의체 구성)
- 참고자료: 성과평가 결과, 중기재정계획(MTEF), 예산편성안
- 활용방식: 구조조정 권고, 감액·재배분 방안, 정부 재정전략회의 반영

- 우리나라는 매년 지출검토를 실시하는 20개 국가에 해당하며 예산편성과도 연계되어 운영
 - 지출검토의 주요 목적은 총지출 수준을 관리하는 데에 있음
 - 전체 지출의 50~70%를 대상으로 포괄적 지출검토를 실시
 - 지출검토 권고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확정·제출되어 협상 및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차기 예산안에 반영
-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성과 관리제도 등 재정의 효율화의 목적을 둔 제도적 요소들을 지출검토 제도 운영으로 인식
 - 각 국가의 지출검토 제도는 제도화 수준·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
 - 지출검토라는 명백한 명칭으로 제도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출수준 관리·재배분·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체계적 검토를 지출검토로 간주

8) 회원국의 제도 운영 현황을 공통 양식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각국 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동일한 구조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구성

2. 지출 효율화 관련 제도

□ 우리나라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의 효율성을 점검⁹⁾

- 재정사업의 효율성·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인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비효율 사업을 발굴·재배분을 추진하는 지출구조조정 제도로 운영
 - 지출검토는 국가마다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어 여러 형태의 모델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재정성과관리사업에 지출검토 기제와 제도적 요소가 존재
 - 예산안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하고, 성과 중심의 사업을 개편하여 핵심사업의 자원 마련함으로써 재정 효율화를 점검
- 재정사업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System)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에 환류하는 제도
 -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¹⁰⁾으로 재정 성과관리에 관한 개념, 추진방향, 운영 효율화, 정보 공개 등 규정을 신설*
 - * 「국가재정법」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12에 원칙,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성과평가, 결과반영) 역량강화, 정보관리 및 공개 등을 규정
 - 개정 법률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간 추진계획이 의무화되어 2022년~2026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에 따라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
- 성과관리 실익이 있는 전 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관리와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수행
 - (성과목표관리) 부처단위의 재정성과를 측정('03년~)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 성과계획서, 결산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사업성과평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성과평가제도¹¹⁾를 운영하는 등 성과에 기반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05년~)

9) 우리나라는 2018년 조사까지는 지출검토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지출검토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제도적으로 그 사이에 달라진 바는 없으나, 2003년부터 53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운용한 성과목표 관리제도가 OECD에서 제시하는 포괄적 지출검토와 개념적 내용이 같다고 인식을 전환한 것으로 판단됨. (김태곤·하연섭, 2025)

10) 개정 전 법률에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평가 실시 등을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로 규정(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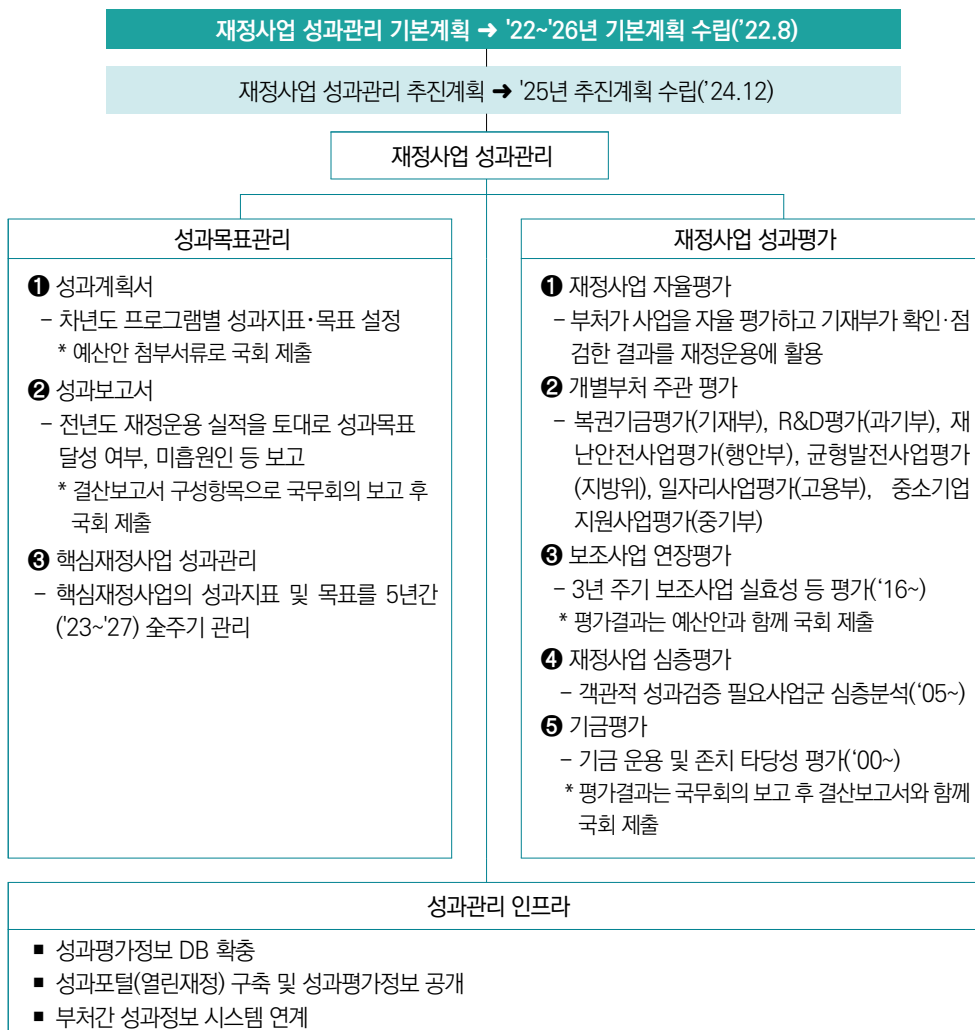
11) (기획재정부) 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기금평가, 보조사업평가, 복권기금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사업 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평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 (성과관리 인프라) 기존에 개별 공개하던 사업별 평가등급을 열린재정에 통합 공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등 세분화된 성과정보까지 시스템에 DB화

● 「'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성과관리 제도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 강화에 중점

-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인 성과관리의 행정부담 경감, 예산편성 환류 및 대국민 공개를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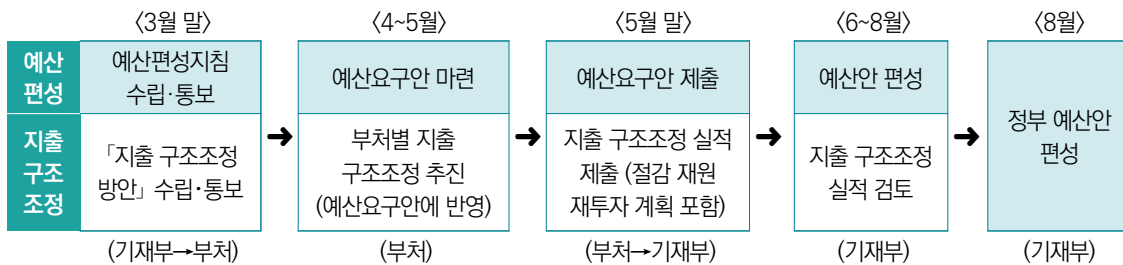
〈그림 6〉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도(2025)



자료: 기획재정부(2024)

- 지출구조조정(Spending Restructuring)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축소하고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재편하는 제도
 -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면 각 부처는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예산안에 최종 반영
 - 매년 재량지출의 10% 절감 등을 목표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추가로 여유재원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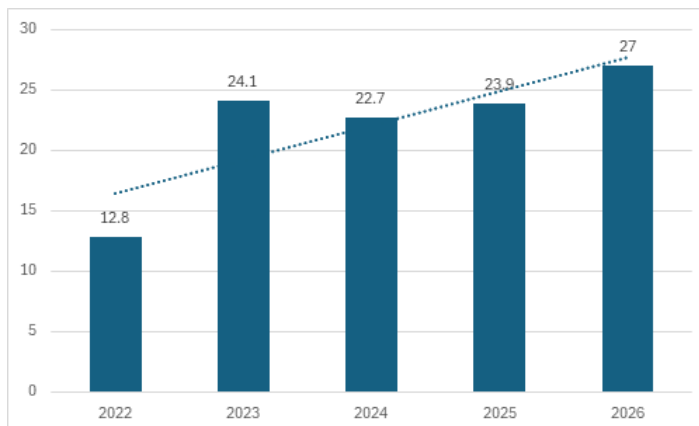
〈그림 7〉 지출구조조정의 진행 절차



자료: 감사원(2023)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재량지출의 구조조정 및 성과중심 개편과 의무지출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
 - 필수요소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재량 지출 전반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
 -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취약계층에 재정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화

〈그림 8〉 우리나라 최근 지출구조조정 실적 추이(2022~2026)



자료: 기획재정부(2025)

- 2026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출구조조정으로 27조원 수준의 지출을 절감하여 핵심과제에 재투자
 - 단순 감액이 아닌 사업 전반의 재구조화 적극 추진, 경상비·의무지출 절감 병행
 - 각 부처별 지출구조조정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 최근 지출검토 제도는 성과관리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추진하는 추세

- 재정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기후변화·디지털 전환·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출절감보다는 정책 수요에 맞는 자원 재배분과 전략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 재정건전성 확보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우리나라는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면서 현행 제도와 정책 여건에 맞게 실효성 있게 고도화할 필요

- OECD는 우리나라의 지출검토 제도의 효과성이 약하다고 평가
 - 매년 재정사업성과관리와 지출구조조정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발생
 -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중기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부처 간 협력 체계 및 전담 기구 도입, 지속적인 제도 발전 노력 등이 요구
- 성과관리 제도 하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배분된 재원을 다른 영역과 사업을 재편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데에는 제한
 - 복수 부처가 관여하는 정책 영역(돌봄·청년·기후 등)을 정책 패키지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재편하거나 자원 재배분을 추진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발생
 - 영국·네덜란드는 부처 간 협업·조정 구조를 강화하여, 개별 사업이 아닌 정책 부문 단위로 검토하여 중복·비효율을 조정
- 총지출 한도나 재정 전략과 지출검토와의 연계가 약해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음
 -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에서 성과관리나 지출구조조정 제도가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부처별 한도 설정이나 지출검토 결과와 중기재정계획과의 직접적 연계는 미흡할 실정
 - 영국은 지출검토 결과에 따라 3~4년 부처별 지출한도를 확정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며, 네덜란드는 지출검토 결과를 예산 설명서(Budget Memorandum)에 포함하여 중기재정전략에 반영

- **지출 효율화에 관한 분석·검증·조정 등 전반적인 절차를 담당하는 조직 또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지출검토 분석·검증·부처 간 조정 등 지출검토 전 단계를 수행하는 조직·체계의 설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
 - 네덜란드는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독립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분석·검증·시나리오 작성·부처 협의까지 전 단계를 수행
- **재정환경의 변화에 맞춘 제도의 유연화와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
 -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과 제도적 특성에 부합한 방식으로 지출검토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 캐나다는 제도의 명칭, 목적, 범위 등을 개편하여 정책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일은 자국의 재정여건과 행정체계에 부합하도록 점진적으로 발전

참고문헌

- 감사원 (2023).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 김대진 (2016). “효율적 예산배분 방안으로서 지출심사제도”, 「예산정책연구」제5권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 81-124.
- 김빛마로·김은숙 (2025), 「영국 지출검토 20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 김태곤·하연섭 (2025). “한국 공공재정관리와 전략적 지출검토의 제도화”, 「한국행정학보」 제59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219-246.
- 대한민국 정부 (2025),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박정수 (2022). 「재정성과관리제도」, FIS 이슈애포커스 22-2호, 한국재정정보원.
- 원종학 등 (2018). 「주요국의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선호 (2017). 「전략적 지출검토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 지은초 (2023).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 분석보고서 23-06, 한국재정정보원.
- 탁현우 (2017), 「예산과정의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7-24, 한국행정연구원.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1. 1. 18.
- _____, 「2단계 지출구조조정(지출혁신 2.0) 본격추진」, 2018. 10. 23.
- _____,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대폭 체계화 됩니다」, 2021. 12. 21.
- _____, 「지출효율화로 재원 마련, 국정과제 등에 재투자」, 2025. 7. 21.
- _____,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5. 8. 29.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irkungsorientierung im Bundeshaushalt-mehr als Spending Reviews*, Monatsbericht, September 2016, 2017.
- Brein, P. (2025), *Spending Review 2025: Background briefing, Research Briefing*, No. CBp-10276, House of Commons Library.
- _____. (2025), *Spending Review 2025: A summary*, Research Briefing, No. CBp-10280, House of Commons Library.
- Doherty, L., & Sayegh, A. (2022). *How to design and institutionalize spending reviews*, 22/04, IMF.
- Government of Canada(2025), *Canada's Federal Spending Reviews: 50 Years of Facts, Figures, and Lessons*.
- _____, (2025), *Our plan: Building Canada Strong*.
- HM Treasury. (2025). *Spending review 2025*.
- Ministry of Finance of the Netherlands(2025), *Spending reviews in the Netherlands*.
- OECD(2020), *OECD Spending review survey*, OECD Publishing.
- ____ (2022), *OECD Journal on Budgeting*, 2022(1), OECD Publishing.
- ____ (2023), *OECD Survey on Spending Reviews, results for 35 countries*. OECD Publishing.
- ____ (2025), *OECD Best Practices for Spending Reviews*, OECD Publishing.
- ____ (2025), *Government at a Glance 2025*, OECD Publishing.

PEMPAL(2022), *Spending review practices in the Netherlands*.

Wales Centre for Public Policy(2025), *Spending reviews: international best practice and key learning*, Policy Briefing.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검색일: 2025.11.17).

네덜란드 재무부, <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finance>, (검색일: 2025.11.17).

캐나다 정부, <https://www.cspc-efpc.gc.ca/>, (검색일: 2025.11.17).

독일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검색일: 2025.11.17).

FIS 재정리포트 25-03

전략적 지출검토(Strategic Spending Review)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